

주간 통일정세

2014-42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김정은, 문화유산보호 강조…“남북·국제 교류해야”(10/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고위간부들과 한 담화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사업이다'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단군의 후손들"이라며 "온 겨레가 민족 중시의 역사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며 민족문화 유산과 관련한 학술교류도 많이 해 단국조선의 역사를 빛내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리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대외에 소개선전하는 데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남북대화 없다"(11/1,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위임'에 따라 '중대 입장'을 천명한다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 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100여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사실을 거론하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성명은 특히 "삐라 살포 망동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 처단할 것"이라며 남한 당국이 이들을 북측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전단 빌미 압박강화…30일 고위급접촉 불투명(10/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남북관계가 현재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남조선이 대화 상대방을 헐뜯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언행을 계속한다면 북남관계의 대방로는 고사하고 열린 오솔길마저 끊기게 될 판"이라고 주장함.

- 北매체, 고위급접촉 확대 없이 연일 관계개선 촉구(10/28,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 민주조선은 28일 '관계개선과 비방중상은 양립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비방중상은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악의와 불신의 표시"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비방중상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
 - 이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자면 뭐니뭐니해도 비방중상이 시급히 중지되어야 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요소들이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며 남측이 "오해와 불신, 적대감을 유발하는 비방중상을 당장 중단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도 28일 '안팎 다른 언동으로는 검열받지 못한다', '왜 심사숙고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은 시대와 민족, 역사 앞에서 자기의 진정성을 검열받아야 할 때"라며 남측에 진정성 있는 관계개선 노력과 실천적 행동을 촉구함.

- 北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동족대결책동…철회해야"(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현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췌버리고(함부로 버리고) 미국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강화와 동족대결, 북침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함.

- 北 신문 "남북대화, 각계층 요구 반영해야"(10/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북남 사이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라며 "따라서 북남대화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며 모든 것을 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4월 제의했다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치켜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 北 노동신문 "南, 대북전단 살포 무조건 막아야"(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빼라 살포의 막후조종자, 흉악한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날이 파국으로 치닫는 북남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 빼라 살포에 대한 비호 조장과 묵인을 당장 중지하고 그것을 무조건 제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함.
- 신문은 1일 '무력 충돌의 위험한 불씨'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지금 북남관계를 엄중히 해치는 가장 첨예한 문제"라며 "빼라 살포는 곧 하나의 전쟁 행위로서 그것이 감행되면 도발을 짓부쉬버리기 위한 소멸 전투가 있기 마련"이라고 경고함.
- 또 '사대매국노들의 얼빠진 핵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지금은 북남관계의 전도가 좌우되는 매우 중대한 시기로서 당국자라면 누구나 언행을 책임적으로 해야 할 때"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발언을 비난함.

■ 北 신문 "南, 미국 '인권공세' 가담시 남북관계 파국"(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인권 모략의 불순한 목적은 가리울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정부를 향해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상전과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적극 가담해 나서면서 민족의 이익을 계속 해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파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北 "南, 전단살포 방임...고위급접촉 이뤄질수 있겠나"(10/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 방식을 비난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26일 남한측에 보내온 것으로 27일 통일부에서 밝혔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제2차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힘.

- 30일 2차 고위급접촉 사실상 무산...北 "南선택 달려"(10/29, 연합뉴스)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29일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뉴스는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을 전함.
 - 이어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 것을 연합뉴스는 보도함.

- 北, '서해 軍통신선' 활용 집중 의도 주목(10/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 간 주요 사안에 대해 전통적인 남북 당국 간 연락체계인 관문점 채널 대신 서해 군 통신선을 활용한 연락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뉴스는 북한이 관문점 채널 대신 서해 군 통신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통일부를 제치고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잠수함발사미사일 기술 개발 추정"(10/28, 연합뉴스)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가 28일(현지시간)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신포에서 미사일 수직발사장치 실험용으로 보이는 시설이 위성사진에서 관측됐다고 밝혔음을 연합뉴스는 전함.
 - 이어 신문은 발사대 모양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 시설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며, 나아가 군함이나 상선에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버뮤데스가 밝힌 것을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국정원 "北, 국내 스마트폰 해킹 시도 정황"(10/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북한이 올해 들어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에 해킹을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유포를 시도해 약 2만여 대의 스마트폰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포착했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음을 보도함.
- 北 유소년축구단, 내달 2일 국제대회 참가차 방한(10/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민간단체 남북체육교류협회가 11월7~9일 경기도 연천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2014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북한의 4·25체육단 유소년축구단이 출전한다고 30일 밝혔음을 전함.

- 우리 정부의 "양면주의적 슐책(남북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북핵문제 등 지적과 對北 빠라 살포·NLL 등 총격전)"을 주장하며 現 남북정세 下에서는 "북남관계의 대통로는 고사하고 겨우 열린 오솔길마저도 끊기게 될 판"이라고 '남측의 태도변화' 촉구(10.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남북간 서해 NLL(10.7)과 MDL(10.18·19) 인근 군사적 충돌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영영 망쳐놓고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죄악"이라고 '남측 책임' 전가 비난(10.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전작권」 전환 연기 관련, '군사주권을 외세에 내맡기는 희세의 매국역적행위,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며 '체질적 악습, 친미굴종의식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비난 및 '강력한 대응' 위협(10.3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韓美 「전작권」 재연기 합의를 '북침야망 실현을 위한 반민족적 범죄' 등으로 비난 지속 및 '北, 핵억제력 강화 정당성' 부여(11.2, 중앙방송·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외무성 "EU '인권결의안' 채택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10/3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30일 유럽연합(EU)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하면 예측할수 없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특히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이러한 장단에 추종하여 EU가 끝내 지난 시기보다 더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인권 문제에서 우리와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후과(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는 보도함.
 - 외무성은 이어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대화와 협력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신문, 日 각료 잇단 야스쿠니 참배 비난(10/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군국주의 야망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행동을 계속하며 군국화로 나간다면 그것은 곧 자멸의 길"이라며 일본 고위 인사들의 최근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함.

■ 北, 美 인권공세에 "사실 왜곡" 거듭 반박(10/28, 노동신문·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28일 '미국의 비열한 인권소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 제목 아래 4개의 논평·논설 등 기획 기사를 싣고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미국 등의 지적을 강하게 비난함.
- 특히 미국 등이 비판하는 '북한의 인권탄압'과 관련, "구태어(굳이) 설명한다면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제도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정당한 조치"라며 "미국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의 원수들의 인권"이라고 강변함.
- 민주조선은 '절대로 통할수 없는 어리석은 모략소동'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인권문제로 북한의 사상·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미국이 인권문제를 우리를 압살하기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상 우리도 이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힘.

■ 조선신보 "日 일부 세력, 북일회담에 찬물"(10/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메아리' 코너에 게재한 '조일회담의 원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일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을 또다시 일본의 일부 세력과 언론매체들이 벌이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납치 문제를 북일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하자는 주장은 '근본'(본질)이 틀렸다고 "조일회담의 기본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진행중인 회담은 조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태는 또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함.

■ 北 신문 "나라들이 교류하면 경제 성과 거둘 수 있어"(10/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라들 사이에 서로 교류하고 협조한다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민족경제 건설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지난 3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나미비아를 방문해 '관광분야

협조 양해문' 등 조약 11건을 체결하고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 8월 러시아를 찾아 무역, 군사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조선신보 "억류자 석방, 북미대화 재개 마지막 기회"(10/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8일 '억류범죄자 석방조치 이후의 조(북)미관계'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미국 범죄자 석방조치는 2기 오바마 정권에서 사실상 조미대화 재개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포기를 자기 행동의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는 조선과 협상 탁에 마주앉으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힘.
- 미 국무부 "파울 석방으로 북핵정책 바뀌지 않아"(10/2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의 석방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북한에 탄도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을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는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 실험용으로 보이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38 노스'의 발표에 대해 모든 관련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위반이라면서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일본 정부당국자, 납치문제 관련 10년만에 방북(10/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조사상황을 청취하려고 27일 방북했음을 보도함.

- 북한-일본, 평양서 납치문제 협의 개시(10/28, NHK; 교도통신)
 - NHK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협의에 일본 측 당국자 12명, 북측 당국자 8명이 각각 참석했으며, 북측 참석자 중에는 특별조사위 산하 납치문제 분과의 책임자인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도 포함됐다고 보도함.
 - 교도통신은 27일 방북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협의 때 "일본은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이 진행 중인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 재조사를 최우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 북한, 과거 납치조사 미비점 인정(10/31, 교도통신)
 -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28~29일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에서 과거에 이뤄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함.
 - 현재 납치문제 재조사를 담당하는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간부는 2002년과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이 내놓은 납치문제 조사 결과에 관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가운데 특수기관에서 나온 일면적인 것이었다"고 북일 협의에서 밝혔다고 교도는 전함.
 - 북한 측은 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길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했고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실종자에 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납치분과로 (사안을) 보내 더욱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사. 대러시아

- "러시아-북한 비지면제 문제 논의 착수"(10/28, 리아노보스티 통신)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4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 일정에서 무비자 제도 도입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자금세탁방지기구, 北 '돈세탁 위험국가' 재지정"(10/27, 미국의 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7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단속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돈세탁 위험국가'로 재지정됐다고 전함.
- "北 외국인 입국금지, 유엔 대북사업엔 영향 없어"(10/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프랜시스 케네디 본부 대변인은 "북한 사무소로부터 출입국과 관련된 이상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평상시와 다른없는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RFA를 통해 밝힘.
- 다루스만 "북한 인권, 안보리에서 조치해야"(10/28,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28일 주장함.
 - 다만, 북한이 자신의 방북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국제사회가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음을 뉴스는 전함.

- **다루스만, 북측 인사와 또 회동…미국, 방북 조건부지지(10/29, AP통신)**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미 동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참사관'을 만나 자신의 방북문제를 논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두 번째 회동결과에 대해 자신의 방북 등과 관련해 결정된 게 전혀 없다면이라도 북측의 적극적인 태도에 고무됐다고 설명함.

- **北대표부 "미국에 인권대화 제의했으나 거절당해"(10/30, 연합뉴스: 미국의 소리(VOA))**
 - 연합뉴스를 30일 보도를 통해 북한 유엔대표부 김 성 참사관은 2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한다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유럽연합측 관계자를 만났느냐'는 물음에 "열흘 전 유럽연합 측을 만나 유럽연합 초안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설떠름(떨떠름)한 답변만 들었다"고 전함.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 유럽연합 유엔대표부의 매튜 크리스토퍼 대변인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목적은 북한 내에서 인권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유럽연합과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은 북한의 어떤 제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EU, 北 요청하면 북한인권결의안 수정 검토"(10/30, 미국의 소리(VOA))**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30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이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결의안 초안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 **북 "인권결의안 수정시 EU인권대표 3월 방북 허용"(10/31, 연합뉴스)**
 - 북한이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의 내년 3월 방북을 허용하겠다면서 EU의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을 거듭 압박했다고 연합뉴스는 31일 전함.
 - 뉴스는 김은철 북한 외교관이 30일(미 동부시간)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에게 이미 초청장을 보냈다면 방북 시점은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을 전함.
 - 그러나 그는 EU가 추진하는 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부분이 주말까지 삭제되지 않으면 람브리니스 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방북 초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뉴스는 전함.

- 다루스만 “北인권결의안 수정 조건 방북 안해”(10/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요구대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일부 조항의 삭제를 조건으로 방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北 외국인 입국자 격리 관찰 방침에 EU 방북 연기(10/3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EU 대외관계청(EEAS) 일행은 EU와 북한 간 정치 대화 차원에서 다음 주로 예정한 방북을 미루기로 했다고 EEAS 대변인이 31일 밝힘.

자. 기타 국가

- 북한 “스페인은 에볼라 위험국”…스페인 기자 입국 거부(10/28, 연합뉴스)
 - 북한이 스페인이 '에볼라 위험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스페인 국적 기자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네덜란드인 대북 사업가가 27(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北 김영남, 콩고 대통령과 회담…친선강화 논의(10/29,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8일 드니 사수 은게소 콩고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북한 측에서 강하국 보건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최철수 콩고 주재 임시대리 대사가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영남, 우간다 대통령과 회담…“친선관계 발전”(10/31,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0일 우간다의 대통령궁전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회담에는 북한 강하국 보건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명정철 우간다 주재 대사와 우간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배석함.

■ 北-우간다 외교당국, 협력 강화 협정 체결(1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우간다가 지난달 31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부문별 회담'을 했으며 "조선 외무성과 우간다 외무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고 1일 밝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7일 이집트 대통령(압델 파타 엘시시)에게 최근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위문 전문(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종혁(北-독일친선의원단위원장)↔하르트무트 코쉬크(독일-북한의원단위원장) 회담, 10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체코 대사, 10월 27일 '국경절' 즈음 리길성(외무성 부상)·리광근(대외경제성부상)·김진범(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문재철(외교단사업총국 부총국장) 등 초대한 가운데 연회 개최(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7일 콩고 도착 및 10월 26일 수단 출발 소식 보도(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10월 26일 수단 방문일정을 마치고 同國 대통령에게 감사 전문(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월 28일 '독일 친선의원단' 위원장(하르트무트 코쉬크)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0.28, 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10월 28일 작별 방문한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와 담화(10.28, 중앙통신)
- 주한미군이 3년 전부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를 가정한 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오래전부터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해 왔다'며 '미국의 사드 구축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0.29,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상), 10월 29일 신임 주북 폴란드 대사(크지슈토프 체벤)와 담화(10.29, 중앙통신)
-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모략적으로 꾸며내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北)를 악의에 차서 핍박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암살해보려는 더러운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11.1, 중앙통신·노동신문)
- '군축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격화시키며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은 핵군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11.1,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국정원 "김정은 9~10월 발목 낭종제거...재발가능성"(10/28,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기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2주 전 다리를 절며 나타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왼쪽 발목에 낭종(물혹)이 생겨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힘.
 - 이어 뉴스는 국정원이 김 위원장은 현재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고도 비만과 무리한 공개 활동 등으로 인해 후유증과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고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女축구 관람...최룡해, 황병서보다 먼저 호명(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여자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군인식당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번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 최룡해 당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태복 당비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박도춘·강석주·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비행훈련 참관...최룡해 또 가장 먼저 호명(10/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만에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함.
 -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오일정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평양공항 공사 질책...마감공사 중단·재설계 지시(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마감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족성'을 살리지 못한 시공 방식을 질책하고 재설계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통신은 1일 김 제1위원장이 평양국제비행장(순안국제공항)을 현지지도 했으며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능오 당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그를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건설장에서 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과 립광웅을 비롯한 간부들이 일행을 맞이했다고 전함.
- 건설 현장 곳곳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전번에 2항공역사(2청사)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하라고 과업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질책함.
- 김 제1위원장은 순안국제공항 맞은 편에 청사와 활주로를 더 짓고 평양 중심부와 공항을 고속철도와 도로로 연결해 "세계적인 비행장"으로 건설할 구상도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공작기관 '225국' 책임자 강관주 사망"(10/31, 산케이신문)
 - 북한의 대외 공작기관인 내각 225국 국장을 지낸 강관주(78, 가명 강주일)가 이달 초 사망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함.
 - 산케이는 복수의 북한·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강관주가 암을 앓다 지난 3일 사망해 5일 장례식이 치러졌으며, 7일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고 전함.
 - 강관주의 사망으로 그의 '개인상점'으로 불려온 225국은 대남공작부서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재편될 공산이 커졌다고 산케이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6일 故 계훈경(인민예술가, 공훈국가합창단 작곡가) 빈소에 화환 전달(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육아원·애육원(※김정은, 10월 25일 현지지도) 준공식, 10월 27일 김기남·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수길(평양시 黨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7, 중앙방송·중앙통신)
- 5월1일경기장(15만석) 준공식, 10월 28일 최룡해(黨비서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장/ 준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9, 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원도 성산역 개건 준공식 10월 27일 최영건(내각 부총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청년동맹」 중앙위 제5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0월 28일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黨 비서),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장철(국가과학원장) 등 참가 하에 제25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폐막식, 10월 28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 현지요해(10.29, 중앙통신)
- 최태복, 양형섭, 김용진(내각 부총리/보고) 참가한 김정일 단군릉 현지지도('94.10.29) 2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10월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지원한 일꾼-근로자들(박성옥, 상업성 산하단위 지배인)에게 「감사」 전달(10.30, 중앙방송)
- 중앙통계국 중앙계산소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10월 31일 진행(10.31, 중앙방송)
- 봉학식료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10월 31일 리효복(평안남도당위 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0.31, 중앙통신)
- 김일성父의 모자이크벽화 준공식, 부령군·성간임산사업소·형제산 능라도피복공장에서 진행(10.31, 중앙통신)
- '김정일 한평생은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를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애국자의 영웅적 한생이었다'고 칭송하고 '모두다 김정은 두리에 뭉쳐 새로운 100년대를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의 년대로 빛내어 나가자'고 강조(11.1,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압록강 인근 평북 '청수개발구' 관광 개시(10/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청수관광개발구 '관광개통식'이 30일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인민정부, 단둥해외여행사유한공사의 협조로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함.
 - 평안북도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의 곽진호 국장은 중앙통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당장은 이미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관광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고 밝힘.
- 北, 연안 개발 대비 '바다오염방지법' 대폭 강화(10/22, 민주조선; 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0월 22일 자는 '법규 해설' 코너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바다오염방지법'을 수정·보충해 공표했다고 밝힘.
 - 개정 바다오염방지법은 6개 장 60개 조로 구성됐다고 민주조선이 설명함.
 - 신문은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건설에 앞세우는 것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며 "해안 연선의 주민지구, 산업지구 건설에 앞서 바다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개정법은 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국가적인 오염 방지 체계 수립, 수질보호구역 지정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해안 지역 기관별로 '해안관리구역'을 설정해 오염 방지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민주조선이 밝힘.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 베트남에 투자 요청...구애공세 강화(10/31, 연합뉴스)
 - 베트남 언론은 31일 북한·베트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 참석차 하노이를 방문한 문철 북한 대외경제성 부국장이 북한의 투자환경과 협력 대상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투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평양 전자의료기구공장 등 보건성 산하 각지 의료기구공장 일꾼-노동자들의 '연간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 선전(10.27, 중앙방송·노동신문)
- 용원리역·배산정역(평안남도) 개건 준공식(연풍과학자 휴양소 휴양생 등 이용), 10월 30일 각각 진행(10.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자강도 강계포도술공장 개건 및 '생산능력 종전 대비 3배 이상·제품의 질 획기적 향상' 등 선전(10.30, 중앙통신)
- 농업과학원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풀씨파종기" 개발 및 '가동(세포등판 축산기지) 능률(골파기→시비→씨앗 파종 등 동시 수행, 파종 구간 임의조절)' 등 선전(10.30, 중앙통신)
- "먼적외선 경량단열 벽돌"의 경제적인 실리(온도 상승·열처리시간 종전 대비 절반 단축, 전력 50% 절감 등)도 선전(10.30,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식물영양 강화제를 대량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새 기술을 확립했다'고 선전(10.31, 중앙통신)
-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덕성탄광, 월 석탄 생산계획 완수(11.1, 중앙방송)
- 위성남새온실(위성과학자 주택지구,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신형 태양열온실) '첫물 남새 수확 및 주택지구 주민들에게 전달' 선전(11.2,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뒤흔부른 떡잎 찾자"...北 '과학적 소질개발' 관심(10/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8일에 개인의 체질과 기초 체력을 측정해 배구 종목에 가장 적합한 선수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북한의 프로그램을 소개함.
 - 이 프로그램에는 "운동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해 육체적 특성, 지능 정도 등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설정돼 있고 선수들의 육체·기술적 성장 과정도 평가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함.
 - 이어 "이 프로그램이 자식을 잘 키워보려는 부모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며 평안북도 신의주 김금순초급중학교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정에 도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에볼라 차단 '총력'... "한약 예방약 개발사업"(10/30,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30일 국경 지역에서 에볼라 검역이 강화됐다고 "모든 출장자들에 대해 20일간의 의학적 감시를 철저히 진행하고 환자들을 제때 찾아내기 위한 사업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에볼라 예방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며 "항비루스(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고려약(한약)들을 이 질병의 예방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함.

- 北, 에볼라 예방 위해 외국인 입국자 21일간 격리(10/30, 연합뉴스)
 -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자를 21일간 격리 수용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30일 보도함.
 - 뉴스는 에볼라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과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별개의 시설에 수용되며,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호텔 등에 수용될 예정이라고 전함.
 - 다만 북한 당국은 외국 공관이나 국제기구 직원이 입국할 경우 북한 내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외국인 페이스북·트위터 접속 전면 차단(10/30, 타스통신)
 - 북한이 외국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고 평양 주재 타스통신 특파원이 30일 밝힘.

- 北 「조선원」, 10월 25일 '2014 청도세계원예박람회(中 산동성 청도시) 야외 전시원경쟁 금상' 수상(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에서(10.14~26) AFC(아시아축구연맹) 'A급감독 자격강습(AFC 강사 '아데쉬르 포우네마트 노데이', B급감독 자격 20여명 참가)' 진행(10.27, 중앙통신)
- 낙랑구역 인민병원 청년일꾼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한 '직관물 등을 통한 위생선전(감염경로·전파경위·방역 등) 활동' 전개(11.2, 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잠수함발사미사일 기술 개발 추정" <美전문가> (10/28, 연합뉴스)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28일(현지시간)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미사일 수직발사장치 실험용으로 보이는 시설이 위성사진에서 관측됐다고 발표함.
 - 버뮤데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시설은 가로 약 35m, 세로 약 30m 크기의 콘크리트 공간에 위치한 약 12m 높이의 발사대 모양 구조물과 부속 건물들로 구성돼 있으며 발사대 모양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 시설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며, 나아가 군함이나 상선에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버뮤데스는 북한이 수직발사관 장착용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으며 북한의 SLBM 개발 시도가 무시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에 따른 위협이 과장돼서도 안 된다고 밝힘.
- 北核·미사일 24시간 감시용 군사위성 2023년 개발 (10/29, 문화일보)
 - 군 고위관계자는 2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 등에 대비해 2023년까지 한반도 전역의 주간 정밀 감시가 가능한 광학관측 (EO) 군사정찰위성 1기와 24시간 주·야간 전천후 정찰이 가능한 영상레이더 (SAR) 군사정찰위성 4기를 늦어도 2023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지금까지 북한 감시정찰 전력은 다목적 실용위성인 영상레이더 아리랑 5호 및 광학관측 아리랑 3호, 휴전선 일대 정찰 목적의 영상레이더 탑재 금강특수정찰기 정도로 제한됐으며, 순수 군사 첩보위성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3년이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첩보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의 확보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 美6자회담 특사 “북핵·北인권, 양립불가 목표 아냐” (10/30, 문화일보)

-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과 북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면서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일러 특사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20년간 진행된 북핵 협상에 대해 “북한과 우리의 협상 과정은 확실히 실망으로 기록됐다”면서 “다만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6자회담인지, 회담이 재개될 때 어떠한 해야 하는지와 무엇으로 구성돼야 하는지 (과거 협상을 통해)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일러 특사는 “북한이 내일 우리에게 와서 비핵화의 길과 6자회담 복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면, (6자회담이 좌초된) 2008년 것들(pieces)을 취한다면 북한의 외교, 경제, 안보 환경이 즉각 변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제 개혁이 가져올 기회를 알아보는 것에 기업과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美전문가 “北, 노동미사일용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 (10/30, 연합뉴스)

- 미국의 안보분야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확산억제·군축 프로그램 소장은 30일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은 아니더라도 노동 미사일 탑재용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확실하게 검증하려면 몇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함.
-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과 위협을 항상 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실을 말할 가능성도 있으며 핵개발을 시작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형화에 일정부분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고 밝힘.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정권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궁극적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체 붕괴하는 것뿐일지 모른다고 밝혔다.

■ 성김, 내주 '친정' 복귀...6자대표·동아태 부차관보 겸해 (10/31, 연합뉴스)

- 지난 24일 한국을 떠난 성 김(54) 전 주한 미국대사가 다음 주 미국 국무부로 정식 복귀하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직하게 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현재 동아태 부차관보 자리는 전임인 제임스 피터 줌왈트가 지난 7월 주세네갈 대사로 지명된 이후 공석 상태이며 현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글린 데이비스는 조만간 이임한 뒤 연말 또는 연초 해외 공관장으로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전문가'인 김 전 대사는 지난 2011년 한국에 부임하기 전 6자회담 특사를 맡아 북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었다.

■ “北, 탄도미사일 발사가능 신형 잠수함 진수” (11/02,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일 “북한이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최근 진수했다”고 밝히며 “북한이 러시아 골프급을 역설계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은 지난달 20일 38노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라고 사진을 공개한 그 잠수함과 동일하다”고 전했으며 이 잠수함은 길이 약 67m, 폭 6.6m로 배수량(수상기준)은 2천~2천500t급 안팎인 것으로 분석됨.
-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기해왔지만, 실제 이 잠수함이 건조된 사실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군보다 6년가량 앞서 수직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3천t급 잠수함 3척에 이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척을 추가 전력화할 예정이다.

나. 미·북 관계

- 미 국무부 “파울 석방으로 북핵정책 바뀌지 않아” (10/2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의 석방으로 미국의 북핵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북한에 탄도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실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의 한·중·일 방문이 이번 석방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사일러 특사는 한국 당국자들과 광범위한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5개 북핵 당사국과의 정규적인 협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 실험용으로 보이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38노스'의 이날 발표에 관하여 사키 대변인은 모든 관련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 北대표부 “미국에 인권대화 제의했으나 거절당해” (10/30,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 김 성 참사관은 2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등에 인권대화를 제의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느냐'는 물음에 “우리 측이 주최한 인권설명회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등 몇 명을 특정해 초청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제의했었다”고 밝혔다.
 - 김 참사관은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비록 거절당하긴 했지만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 앞서 북한은 올해 유엔총회에 맞춰 지난 9월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토론회에 15년 만에 미국을 찾은 리수용 외무상 등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올해 중국 방문 北 주민 감소…작년보다 6.5%↓” (10/30, 연합뉴스)
 -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2014년 1~9월 외국인 입국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 친척방문 등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수는 모두 13만9천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14만9천500명에 비해 약 6.5% 정도 줄어든 수치임.
 -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중국 방문 북한 주민의 수는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올해 들어 냉각된 북중 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짐.
 -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중 '취업' 목적이 6만6천명(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의' 또는 '사업' 목적이 2만6천700명(19%), '여행·관광' 목적이 1천100명(0.79%)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 방문자가 11만3천명으로, 여성 방문자보다 훨씬 더 많았음.

-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 무기한 연기” <환구시보> (10/31, 연합뉴스)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1일 중국 단둥시 정부 측이 그동안 북한과 연결된 신압록강대교 및 새 통상구(세관·검역·출입국관리시설)가 30일부터 가동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업계획상 교량 본체와 함께 완공됐어야 할 북한 쪽 접속교량이 건설되지 않으면서 대교 개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중국이 20억위안(3천400억 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를 모두 부담해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하고도 개통을 못 하는 원인에 대해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북한 측이 대교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 중국 측 투자를 요구하며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북·중 경협을 상징으로 꼽혀온 신압록강대교는 총연장 3천26m, 왕복 4차로의 사장교(斜張橋)로 2010년 말 착공해 현재 교량 건설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북한 쪽 인프라 건설 지원이 소극적인 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악화한 양국관계와 '정상적인 국가관계' 정립을 원하는 중국 측 태도 변화를 꼽고 있음.

- “북한서 에볼라 관련 격리된 중국인 없어” <신화통신> (11/01,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평양의 중국대사관을 인용해 지난달 29일 북한이 자국 주재 외국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부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관찰 방침을 밝힌 뒤 이들이 지난 31일까지도 중국 국민의 북한 왕래가 평소와 같으며 격리된 중국인은 없다고 보도했음.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31일 “북·중을 오가는 국제열차 및 항공편은 정상 운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공항과 육로 국경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체온 검사와 방역정보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의료진을 외국인이 투숙한 호텔로 보내 체온 검사와 역학관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이 지난달 24일부터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함에 따라 중국 여행사들은 북한관광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해당 업무를 중단했지만 여행 이외에 중국인 기업가와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목적 방북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납치문제조사단 27일 입북 (10/27, 연합뉴스)
 -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자 10명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조사상황을 청취하려고 27일,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해 28일부터 29일까지는 납치 문제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방위원회 안전 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등과 만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난 7월 초부터 조사를 진행 중인 북한이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이미 생환한 5명을 제외하고 12명, 이하 공인 납북자)에 대한 생존 정보를 내놓을지 여부이며 북한이 전후 제일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처(妻)와 관련한 조사결과 등 공인 납북자와 무관한 정보부터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측은 북한이 공인 납북자와 관련해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고'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됨.
 - 그러나 북한이 일본인 처와 '특정 실종자(납북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일본 정부는 '그들이라도 먼저 데려오자'는 여론과

'공인 납북자와 관련한 진전을 이루기 전에 타협해선 안 된다'는 여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베 “北, 과거 납치조사결과에 구애 안받는다 천명” (10/31, 연합뉴스)
 - 아베 총리 27~30일 방북단 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온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부터 북한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각도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고 밝힘.
 - 북한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본인 납북자(이하 공인 납북자) 12명 중 요코타 메구미 씨를 비롯해 8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아베 총리의 말대로라면 북한은 이런 기존 입장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는 또 “(방북단이)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북측에 전했다. 일본의 강한 결의를 북한 최고 지도부에 전했다”고 강조했지만 교도통신은 “일본과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현안을 해결한다는 기본 인식을 확인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대응은 '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이 요구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 “북한, 과거 납치조사 미비점 인정” <일본당국자> (10/31, 연합뉴스)
 - 납치문제 재조사를 담당하는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간부는 2002년과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이 내놓은 납치문제 조사 결과에 관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가운데 특수기관에서 나온 일면적인 것이었다”고 북일 협의에서 밝혔으며 이는 납치문제 재조사에 직접 관여하는 북한 당국자가 과거 조사의 부족한 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교도는 밝혔음.
 - 북한 측은 또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길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했고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실종자에 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납치분과로 (사안을) 보내 더욱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이번 북일 협의에서 납치된 일본인의 안부에 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것에 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납치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는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보고 내용을 정부가 제대로 분석·판단해 빨리 다음 수를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 러·북 관계

- “北 철도 전체구간 현대화에 42조원 필요” <러'건설사> (10/29, 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시베리아 옴스크에 본사를 둔 토목건설회사 '모스토빅' 사장 올렉 쉬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륙철도는 모두 7천km이며 그 가운데 3천200km를 우선적으로 개보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은 이 공사를 7년 만에 끝내자고 요구했지만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쉬쇼프는 3천200km 구간 개보수에는 25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모스토빅이 80~100억 달러의 공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공사비는 북한 내 광물 자원을 판매해 조달할 계획이라면서 판매 대금이 합작기업으로 들어오면 이 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쉬쇼프는 북한 내 티탄(타이타늄), 탄탈 등의 희유금속(rare metal)과 금, 석탄 등에 관심이 많으면서 석탄은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함께 참석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장관 역시 “북한의 희토류는 중국 매장량보다 7배나 많으며, 북한 전체 광물 자원의 가치는 6조 달러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북한 비자면제 문제 논의 착수” <러' 장관> (10/31, 연합뉴스)
 - 최근 들어 급속도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비자 면제 협정 체결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 갈루슈카는 “이 일(비자면제협정 체결)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양국 협력 일정과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 결과 보고서에도 포함됐다”고 소개했으며 이는 양국이 무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앞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미임.

- 무비자 제도는 관련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3개월 이하 단기로 자국을 찾는 상대국 방문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비즈니스 상담·관광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자들이 크게 늘어나 협정 당사국들 간 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평가됨.

바. 기타

- "EU, 北 요청하면 북한인권결의안 수정 검토" <美방송> (10/30, 연합뉴스)
 -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매튜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29일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초청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입장에 대한 질문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목적은 북한 내에서 인권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EU와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은 북한의 어떤 제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7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최고지도자를 언급한 7항과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8항이 삭제되면 자신의 방북을 초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EU 등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음.
 - 하지만 북한이 직접 EU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수정 검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전했으며 "결의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북한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EU와 결의안 초안 공동 제안국이 초안의 7항과 8항을 삭제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다루스만 "北인권결의안 수정 조건 방북 안해" (10/31,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일부 조항의 삭제를 전제로 방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 때문에 북한이 방북을 취소한다고 해도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북한이 방북 요청을 취소하면 못 가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다음달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이전에 방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방북과 관련해

- 양측이 의논할 일도 있을 텐데 시일이 너무 짧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
- 북측은 지난 27일(미국 현지시간)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조건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 일부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2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으며 회원국들에 배포한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난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친 북측과의 접촉에서 북측이 자신에게 최대한 빨리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RFA에 밝혔음.

■ 미 국무부 “북한 ICC 회부 논의, 안보리와 협력할 것” (10/3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이번 사안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ICC의 당사국이 아니고 통상 특정한 권고를 하지 않지만 (ICC 회부방안이 담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으며 “앞으로 분명히 추가로 진행할 일이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유엔의 우방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 또한 사키 대변인은 “북한 인권은 유엔과 유엔 특별보고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은 분명히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기록을 갖고 있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9월 제69차 유엔 총회기간에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이벤트를 한데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정례화 공감 (10/27,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정례화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회의석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례화 문제에 대해 양측 장관들 사이에서 공감이 있었다”면서 “정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2+2 회의가 정례화 되면 양측의 별도 합의 절차 없이 2년마다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외교·안보 차원에서의 양측 간 협력을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음.
- 미국은 호주 및 일본과 정례적으로 2+2 회의를 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 일본과 달리 안보 문제의 경우 그동안 양국 국방부간 안보정책협의회(SCM)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는 “SCM에 더해 외교·국방장관간 2+2 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면 관련 논의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퍼트 美대사 “한미, 매우 소중·특별한 동반자관계” (10/30,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30일 부임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한미관계는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동반자 관계”라면서 “이 관계는 공동의 희생, 가치관,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같이 중요한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 및 국민과 긴밀히 일할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우리가 완전한 협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리퍼트 대사는 또 “중요한 군사동맹 강화와 경제무역 관계 확대를 위해, 전 세계적 과제를 양국 동맹이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공동 가치와 이해를 강화시키는 강력한 인적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양국 동맹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테러 방지와 해적 퇴치, 기후변화, 개발 등을 꼽았음.
- 또한 “양국 관계가 얼마나 깊고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안보, 경제, 정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다. 또한 양국을 묶어주는 깊은 끈이 있다. 양국의 운명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사용후 핵연료 공동연구서 '형상변경' 검토 합의 (10/30,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처리) 공동연구에 대한 추가 합의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형상변경'을 적절한 시점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 변경 및 재처리가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 하에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임.
 -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합의' 문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19일자로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5개항의 합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같은달 22일 이를 수용했으며 미국이 요구한 5개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 준수 ▲평화적 이용 ▲기술의 물리적 보호 ▲제3자에 기술 재이전 금지 ▲재처리 및 형상 변경 관련 조항임.
 - 미국은 재처리 및 형상 변경 관련 조항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과 관련 장비는 연구·개발용도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양국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떤 핵물질도 형상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다만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일정시점에 형상 변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적절한 시점에서 형상변경에 대한 동의문제를 검토한다는데 합의한다"는 조항을 넣었음.
- 리퍼트 "美, 한일협력 조용히 독려...중재지역할 안해" (10/31,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신임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독려했느냐'는 질문에 "인준 청문회에서 그리고 내내 말했듯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리퍼트 "양국은 훌륭한 외교 전통을 가진 두 훌륭한 국가들로 분명히 우리는 양측이 협력하도록 양측 모두를 조용히 독려하고 있다"며 윤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윤 장관과) 많은 양자·다자 사안을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인 면담을 했다. 아주 중요한 이 관계에서 좋은 모멘텀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윤장관은 이날 "이번 주한대사 임명은 (양국) 동맹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한국 역사와 우리 동맹관계에 있어 아주 중대한 단계,

중대한 시점에 도착하셨다"고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중국, 한국정부 송환 중국군 유해 정식 안장 (10/29, 연합뉴스)

- 중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3월 말 넘겨받은 한국전쟁 당시 사망 자국군 유해 437구를 29일 정식으로 안장했으며 중국 민정부, 외교부, 랴오닝성, 인민해방군 선양군구(軍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안장식에는 리시(李希) 랴오닝성 성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했음.
- 중국 당국은 유해 안장 장소인 선양 시내 '항미원조(抗美援朝)열사능원'의 외부인 출입을 진입로부터 전면 통제하고 안장식을 내부 행사로 진행했음.
- 중국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사망·실종했거나 정전 이후 북한의 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숨진 중국군 장병과 노무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19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북한과 공동으로 2012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군 묘역을 개보수했고, 지난달에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중국군 묘역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음.

■ 한·중, 북한 핵개발·핵보유 '불용' 재확인 (10/31, 연합뉴스)

-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 및 오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다웨이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지난 7월 초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4개 항을 다시 상기하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음.
- 황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대외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엄정한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북한의 '병진정책'이 갖는 명백한 한계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계속되는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시급성을 갖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강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 문제는 물론 북한의 정세와 북·중간 교역,

최근 냉각기를 맞은 북중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협의했지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 한·일 관계

- 유흥수 주일대사, 부임 65일만에 아베 총리 만나 (10/27, 연합뉴스)
 - 유흥수 주일 한국 대사는 27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총리 관저를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부임 인사를 겸해 약 10분간 면담했으며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 한일 외교 소식통은 “유 대사의 부임 직후 아베 총리가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임시 국회가 이어져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만남에 앞서 면담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 대사는 올해 8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같은 달 23일 일본에 부임했음.
- 조지프 나이 “고노담화 문제삼으면 일본 상처입을 것” (10/31, 연합뉴스)
 - 미국의 국방차관보를 지낸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 “고노담화를 다시 문제 삼으면 일본이 상처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음.
 - 3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나이 교수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이 80년 전의 과거를 들추는 것은 큰 잘못이며 중국,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일본을 공격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고 우려했음.
 - 나이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 대응을 위해서도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했고 아베 내각이 지난 7월 각의 결정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욱 책임있는 국가가 되고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라. 미·중 관계

- 중국언론 '미국 총영사관의 홍콩시위 개입설' 제기 (10/27, 연합뉴스)
 -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이 홍콩언론을 인용한 27일 보도에 따르면 '센트럴 점령' 시위가 시작되기 5일 전 시위 주도자 16명이 홍콩미국센터로부터 최신 아이폰6를 받았고 반드시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발송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함.
 - 그러나 지난달 24일 홍콩 문화보(文匯報) 등 일부 친중 매체는 홍콩 주재 총영사관이 홍콩미국센터를 후원하며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미국 정보요원 출신 인사가 센터주임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미국총영사관 소속 직원과 정보기관 요원이 홍콩학생대표들과 회의를 하고 수업거부 행동을 논의했다는 기본법위원회 소속 위원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음.
 - 관찰자망의 이런 보도는 결국 미국정부가 미국총영사관과 홍콩미국센터를 통해 이번 시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홍콩 민주화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시위의 순수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여짐.

- 미·중 정상회담서 IS 대응책 등 테러문제 논의 (10/30,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10~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에서 중미간 신형대국관계의 건설 방안과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 있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의제에는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과 양국이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협력이 포함된다"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대응과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앞서 홍콩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IS 대응책을 포함해 테러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을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것이 됨.
 - 홍 대변인은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APEC 회의 참가와 공식 방중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의심을 줄임으로써 중미 신형대국관계의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IS 공습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채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운동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호소했음.

- 대만-록히드마틴, 기뢰제거 소해정 공동건조...중국 반발 (10/31, 연합뉴스)
 - 대만 최대 조선업체 청푸(慶富)가 록히드마틴 등 미국·이탈리아 군수업체와 손잡고 대만 해군의 기뢰제거용 소해정 6척을 공동 건조하기로 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계약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기뢰제거용 소해정 구매에 쓰일 국방부의 예산 총액이 352억 대만달러(1조2천355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며 록히드마틴은 성명을 통해 첫 소해정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지만 나머지 5척은 대만에서 건조한다고 밝혔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외국을 막론하고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대만과 어떤 형태로든 군사기술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관련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엄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실제 행동으로써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관계의 평화발전과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 중·일 관계

- 중국군 “중일 해상연락시스템 구축협상 재개 논의 중” (10/31, 연합뉴스)
 - 31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양위권(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일 국방 당국이 해상연락시스템 (구축) 협상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했느냐'는 질문에 “현재 양국 국방 당국이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조만간 양국이 동중국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국방 당국 간의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양 대변인은 그러나 올해 들어 일본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를 추적·감시하는

빈도가 부쩍 증가했다고 비난하며 “일본은 중일 간 공중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중일 간 정치적 교류가 점점 재개되는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근년 들어 나타난 중일 관계의 곤란한 국면은 일본이 가져온 것”이라며 “일본은 잘못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성실한 조치를 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어선 북태평양 산호 채취에 중일 갈등 조짐 (11/01, 연합뉴스)

- 1일 교도통신, 요미우리(讀賣)신문,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천km 떨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일대에 중국 어선이 대거 접근하였으며 대다수 어선들이 산호를 노리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진입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불법으로 산호를 채취한 혐의로 일본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순찰한 결과 오가사와라제도 주변 해역 등에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선박이 212척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그는 “중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영토, 영해는 단호하게 지킨다는 결의”라고 강조함.
- 주일 중국대사관 측은 최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일관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해양 동식물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 어민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해상 생산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어선의 접근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바. 일·러 관계

■ 러시아-일본 극동해역서 합동군사훈련…러제재 후 처음 (10/28, 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일본이 동참한 뒤 중단됐던 군사교류를 재개했으며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교류 재개에 나섰다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하마기리'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피터대제 만에서 합동 훈련을 벌였으며 훈련은 해상에서 화재를 당한 선박의 불을 끄고 비상 보트로 탈출한 선원들을 구조하는 가상 상황에 기초해 실시됐음.
- 러시아 해군과 해상자위대의 합동훈련은 지난 1998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돼 왔고 이번이 15번째며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한 이후 이루어진 양국 간의 첫 합동훈련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견제에도 양측이 필요한 분야에서 공조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 쿠릴 4개섬 정밀지도 완성 (10/29, 연합뉴스)

- 아사히(朝日)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지리원은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축적 2만5천 분의 1의 쿠릴 섬 지형도를 올해 2월 완성했으며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쿠릴 섬을 실측하거나 항공사진도 찍을 수 없어 5년에 걸쳐 섬의 지면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 자료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겨울에 확보한 화상은 지표면 등이 눈에 덮여 있어 활용할 수 없고 봄에서 가을 사이에는 구름이 많아 사진을 확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 이로써 일본은 1922년에 쿠릴 4개 섬의 5만 분의 1 지도를 만든 이후 92년 만에 이 지역의 새로운 정밀 지도를 완성했음.

■ 러일본 집권 자민당 부총재 5일 러시아 방문 (11/01, 연합뉴스)

-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일본 무도관이 파견하는 무도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5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세르게이 나리슈킨 하원 의장 등 정계 요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 또한 전직 총리인 세르게이 키리엔코 로스아톰(러시아 원자력 공사) 사장과도 회담함.
- 고무라 부총재의 러시아 방문은 체육 행사를 명목으로 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협상 등을 위해 러시아와 계속 대화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北인권' 거론은 체제붕괴 노린 악랄한 음모" 주장(10/28, 데일리NK)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와의 대담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세에 대해 체제 붕괴를 노린 악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 매체는 이날 "미국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확산시켜 '북핵'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 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 또한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헐뜯고, 사회주의 체제를 흔들어보려고 미친 듯이 놀아대고 있다"며 "우리를 국제형사재판소의 피고석까지 앉혀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 북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10/29, 미국의 소리)
 -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으며, 최 부국장은 'AP통신'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했으며 특별보고관도 방북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말함.
 - 최 부국장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하지만 북한은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한 새롭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들은 소문과 날조, 왜곡에 기초한 보고서였다고 주장했다.

- 北 외무성 "EU '인권결의안' 채택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10/3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30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유럽연합(EU)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하면 예측할수 없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외무성은 "미국의 이러한 장단에 추종하여 EU가 끝내 지난 시기보다 더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인권 문제에서 우리와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대화와 협력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선전하며 최근 "진정한 인권 증진을 위하여 EU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결되었던 인권대화 진행 문제와 유엔 조선인권상황 관련 '특별보고자'(특별보고관)의 방문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아량을 보였다"고 밝혔음.

■ **北대표부 "미국에 인권대화 제의했으나 거절당해"(10/30,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 김성 참사관은 2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등에 인권대화를 제의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느냐'는 물음에 지난 7일 유엔에서 개최한 인권설명회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몇 명을 특정해 초청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고 응답했음.
- 그는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비록 거절당하긴 했지만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 이어 '북한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한다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유럽연합측 관계자를 만났느냐'는 물음에 "열흘 전 유럽연합 측을 만나 유럽연합 초안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설떠름(떨떠름)한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 또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문제와 관련, "그에 대한 방북을 허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은 유럽연합의 태도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의 문구 수정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음.

■ **평양 육아원·애육원 준공... "원수님 사랑 속에 일떠서"(10/30, 데일리NK)**

-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떠올린 행복의 요람'이라는 기사를 통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준공됐다고 전했다.
- 준공식에서 연설자로 나선 최태복 당 비서는 "김정은 원수님의 아버지 사랑 속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희한하게 일떠섰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과시되게 되었으며 원아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하고 행복 넘친 생활을

누리게 됐다"고 강변했음.

- 신문은 평양 육아원·애육원에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과 치료실, 지능놀이실과 물놀이시설 등 갖가지 유희시설 등이 갖추어 있다고 소개함.

■ 北 신문 "南, 미국 '인권공세' 가담 시 남북관계 파국(11/2,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일 '인권 모략의 불순한 목적은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미국에 동조하면 남북관계의 파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신문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상전과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음.

2. 북한 인권

■ 속초시의회, 국회·통일부 등에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10/27, 연합뉴스)

- 강원 속초시의회는 27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바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음.
-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국제적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민족동질성을 공유하는 대한민국이 관련 법률 마련을 지체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국회와 정부는 비핵화와 인권개선의 요구에 응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고 외국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음.

■ ICNK, 유엔서 북 인권결의 지지 활동(10/27,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7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음.
-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 권고 등을 담은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뉴욕 유엔본부를 찾았다고 밝혔음.

- 권 사무국장은 유럽연합 등이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법원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회람하면서 북한도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그들의 허구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음.

■ LA서 북한인권 촉구 결의대회(10/27,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력 한인단체 관계자 수십 명이 모여 북한인권회복 운동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음.
- 참석한 단체들은 미국에서 북한인권 회복 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한국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음.
- 이들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응할 것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한국 정부도 나설 것, 그리고 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외교적 노력에 나서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집회 잇따라(10/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결의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음.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은 지난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8일 오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는 10월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학생 북한인권주간을 선포하고, 31일까지 전국 26개 대학과 함께 행사를 진행함.

■ 요덕수용소 인권 문제 불거지자… 北, 몰래 폐쇄 움직임(10/28, 조선일보)

- 북한 당국이 최근 인권유린의 상징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요덕군 소재 15호 정치범수용소(요덕수용소)를 비밀리에 폐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대북 소식통은 27일 "북한인권을 외부에서 자꾸 문제 삼으니까 다른 데로 옮긴 뒤 외부에 공개하려고 한다"며 "움직임이 위성에 잡히지 않도록 분산해서 밤에만 빼내고 있다"고 밝혔음.

- 소식통에 따르면, 수용소를 일반 농장으로 보여주기 위해 농민들을 대신 들여보내 농사를 짓게 할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은 요덕수용소 정치범들을 수용할 별도의 수용소를 따로 짓지 않고 기존의 수용소들에 분산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루스만 "북한인권, 안보리에서 조치해야"(10/29,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상황 조사결과 보고에서 북한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는 회원국 대표들에게 배포된 보고서에서 유엔 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만, 북한이 자신의 방북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국제사회가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 그는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자이드 알-후세인과 함께 북한 대표 4명을 만났으며 "북한이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놀랐다"고 밝혔다.
- 그러나 북한 측은 유엔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내용을 빼달라는 점을 전제로 했으며, 다루스만은 이를 유럽연합과 일본에 전달했을 뿐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 또한 자신의 보고서에서 'ICC 회부'를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COI 보고서를 보면 ICC 회부만 유일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포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 유엔 총회 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 'ICC 회부' 명시(10/29, 연합뉴스)

-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A4 용지 8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draft proposal)을 공개했다.
-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김정은 등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음.
- 이번 결의안은 유엔 총회 3위원회 회기(다음달 27일까지)가 끝나기 직전인 다음 달 말께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엔 총회 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 총회로 올라가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됨.
- 정부 소식통은 "유엔 총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과 관련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의미"라면서 "총회에서 어느 정도의 다수로 채택되느냐가 관심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음.

■ 디루스만, "방북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어야"(10/29, 자유아시아방송)

- 마르주키 디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부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단독 회견에서 조건부 방북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방북이 성사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를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음.
- 보고관은 COI 보고서 내용 중 북한이 특별히 삭제를 원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사항이 자신의 방북 성사를 위한 거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
- 또한 지난 27일 북한 관리들과 면담한 뒤 28일에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인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 이어 29일 주유엔북한대표부의 김영호 참사관을 다시 만나 자신의 방북에 대해 논의했음을 전함.
- 다만 방북 때 정치범 수용소 등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북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런 무조건적 방북이 타협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북한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북하지 않겠다고 밝힘.

■ 미 "디루스만 방북때 수용소 방문해야"(10/2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조건부로 이를 환영했음.
-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환영하지만 그의 방북은 반드시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또 그가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함.

- “북한인권문제, 보수 진보 틀에서 벗어나서 다뤄야”(10/29, 연합뉴스)
 - 평화재단 주최로 29일 열린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남북한인권문제와 통일준비'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틀에서 벗어나 국제인권의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권단체들 “다루스만 방북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맞교환 안돼”(10/30, 미국의 소리)
 - 국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요청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유엔 총회 결의안 일부를 맞교환 하는 등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초청을 환영하면서도 대화는 뭔가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 그 자체여야 한다고 언급함.
 - 유엔감시기구인 유엔 위치의 리온 살티에 부국장은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의 결과라고 보았음.
 -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성 보다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며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방북과 관련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24일 유럽연합 외교관들을 인용해 쿠바와 중국이 유럽연합을 접촉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대가로 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삭제하는 제안을 했다고 전함.
 - 휴먼 라이츠 위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북한이 벌써 준수했어야 할 국제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음.

- EU '북한 요청 시 인권결의안 수정 검토 가능'(10/30, 미국의 소리)
 -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매튜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29일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초청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입장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변화시켜 북한 내에서 인권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은 북한의 어떤 제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함.

■ "북한 정치범 수용소 확대...숙청·탈북자 처벌 강화와 연관"(10/30, 미국의 소리)

- 정보위원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대폭 확장됐으며, 수용소들이 여의도 면적의 64배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고했음.
-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에 인접했으며, 인근에 16호 화성(명간) 관리소가 있는 길주의 만탐산 일대를 확장한 것으로 보임.
- 국정원은 만탐산 인근 수용소의 확장 이유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되는 간부들에 대한 숙청 및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함경남도의 15호 요덕관리소의 축소 혹은 폐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이런 조치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최근의 국제사회 압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美6자회담 특사 "북핵·北인권, 양립불가 목표 아냐"(10/30, 연합뉴스)

- 시드니 사일러 미국 6자회담 특사는 30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고 밝혔음.
- 사일러 특사는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함.

■ 獨외무 "北동맹국 한반도 통일 저항 예전만큼 크지 않아"(10/31, 연합뉴스)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되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인권 문제를 논해야 할

- 필요가 있는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 얘기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도 그런 경우"라고 응답함.
- 그는 "북한과 EU 간에 대화를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마도 북한 정권이 에볼라 위기를 이용해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21일간 검역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국제적 교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EU와의 접촉, 관계개선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을 들며 "인권 문제를 포함한 정치 대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EU의 역할을 강조했다.
- 미 국무부 "북한 ICC 회부 논의, 안보리와 협력할 것"(10/31, 연합뉴스)
 -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 차원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지지를 표하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이번 사안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동시에 "북한인권은 유엔과 유엔 특별보고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음.
 - 사키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뇌물 수수, 여자 문제, 한국 드라마 시청 등의 혐의로 당 간부 1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극도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음.

3. 탈북자

- '나우' 올 들어 탈북자 38명 구출(10/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남북청년들의 모임인 나우(NAUH)는 올해 10월 현재 탈북자 38명을 구출했다고 밝힘.
 - 단체 대표 지성호 씨에 따르면 이 단체가 구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청소년과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13~14살의 꽃제비 출신 청소년들을

구출하고 있음.

- 또 중국으로 탈북 했던 북한의 부부가 강제 복송되고 중국에 남겨진 10대 소년을 구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음.
- 지 대표는 중국에서 제3국의 안전한 곳까지 탈북자 한명 구출하는 데 미화 약 2천 달러 정도 필요하다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수익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탈북자 신동혁 "북한정권이 아버지 인질로 삼았다"(10/29, 연합뉴스)

-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 신동혁 씨는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독재자가 공개한 영상 속의 인물이 아버지가 맞다"며 "북한 정권에서 아버지를 인질로 삼았다"며 북한의 인권 탄압을 재차 비난했음.
- 이에 앞서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신 씨의 아버지가 등장해 "정치범 수용소는 없었다"거나, 신 씨에게 "당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바 있음.
- 신 씨는 "(북한) 독재자가 내 아버지께 무슨 행동을 하든 내 눈을 가릴 수 없고 내 입을 막을 수 없다"며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고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 탈북 여대생, 영국 의회서 북한 실상 증언(10/30, 연합뉴스)

- 영국 의회의 북한문제 초당파 의원그룹은 29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회의실에서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박연미(21) 씨를 포함한 탈북여성 2명을 초청해 증언을 청취했음.
- 박 씨는 이날 자신을 북한의 암시장을 체험한 '장마당 세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과 같은 장마당 세대들은 "더는 북한 정권의 선전과 세뇌를 끝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또한 자신은 청소년 시절부터 장마당에 물건을 팔면서 시장을 체험했고, 타이타닉 같은 외부세계의 영화를 접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 등 희생자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음.
- 영국에 정착한 청진 출신의 탈북여성 박지현 씨도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희생돼 아들을 낳고서 복송돼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연을 증언했음.

- 검찰 탈북자 동향 北에 넘긴 40대 탈북女 기소(10/30, 연합뉴스)
 - 대구지검은 북한 당국과 접촉한 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 동향을 수집해 북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으로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김모(45) 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김 씨는 2012년 가을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평양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지시에 따르라"는 전화를 받았음.
 - 그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경북 경산, 영천 등에서 탈북자가 운영하는 다방, 식당 등에 위장 취업해 탈북자 10여 명의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생활형편 등을 수집해 북한 영사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검찰 관계자는 "북측이 먼저 지령을 내린 것인지, 김 씨가 스스로 북측과 접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 "숨어있으라" 말 믿었는데... 탈북자 10명, 중국서 체포 복송 가능성(10/31, 국민일보)
 - NK 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31일 오전 탈북자 10명이 중국 운남성에서 공안에 긴급체포되어 강제복송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힘.
 - 체포된 탈북자들은 20~30대 여성 7명과 어린 아기 1명, 북한에서 수배를 받고 있는 남성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임.
 - 김 대표에 따르면 체포된 탈북 여성 중 1명은 세 번째 탈북 시도이기 때문에 복송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어 긴급한 구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
 -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탈북 브로커 한명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브로커의 제보로 내용을 접한 주 중국 우리대사관은 중국 정부를 통해 탈북자 10명의 안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이산가족

- 특이사항 없음.

5. 납북자

- 일본 납치문제조사단 27일 입북(10/27, 연합뉴스)
 -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외무성과 내각관방·경찰청·후생노동성 등에 소속된 일본 당국자 10명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조사상황을 청취하려고 3박4일 일정으로 27일 방북했음.
 - 이들은 28일부터 29일까지는 납치 문제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방위원회 안전 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등과 만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 북한-일본, 평양서 납치문제 협의 개시(10/28,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은 28일 평양에서 납치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평양발로 보도했음.
 - 납치문제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양측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평양 내 특별조사위의 전용 청사에서 협의했음.
 -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협의에 일본 측 당국자 12명, 북측 당국자 8명이 각각 참석했으며, 북측 참석자 중에는 특별조사위 산하 납치문제 분과의 책임자인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도 포함됐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방북한 이하라 국장은 협의 때 "일본은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이 진행 중인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 피해자(이하 공인 납북자) 12명의 안부 재조사를 최우선할 것을 요구했음.
 - 또 서 위원장은 이하라 국장 등 일행의 방북에 대해 "조·일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함.

- 아베 "北, 과거 납치조사결과에 구애 안 받는다 천명"(10/30,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0일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각도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고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또 "(방북단이)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 재차 명확하게 북측에 전했다. 일본의 강한 결의를 북한 최고 지도부에 전했다"고 강조했다.
- 방북단은 북측으로부터 납치 문제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체제, 조사 방법,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며, "특수 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부연했음.
 - 방북단은 납치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결과 통보를 북측에 요구했다고 아베 총리는 전했다.
 - 교도통신은 "이번 정부 대표단의 평양 파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北,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위해 한국에 도움 요청(10/27, 데일리NK)
 -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계기로 북한이 방역시스템, 의약품, 기자재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 측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 대한적십자 '북한, 에볼라 예방의약품 지원 요청한 적 없어'(10/28, 미국의 소리)
 -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으로부터 에볼라 등 예방의약품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으며, 다만 국제적십자사연맹(IFRC)를 통한 북한 대상 의약품 지원 사업에 아시아 각국 적십자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잠정합의했고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 후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미 NGO, 북한에 140만 달러 상당 의약품 지원...12월 중순 도착(10/28, 미국의 소리)
 -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카어스(AmeriCares)는 북한에 14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했으며, 12월 중순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다.
 - 지원 물품에는 항생제와 진통제, 심혈관 관련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 용품, 장갑, 스카프, 담요 등이 포함됐으며,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것임.
 - 아메리카어스는 지난 3월과 4월, 6월에 각각 37만 달러와 180만 달러, 8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 용품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 지원한 14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까지 합해 올해 북한에 지원한 의약품은 총437만 달러 상당에 달함.
- WFP 대북 식량 지원 4개월 연속 증가(10/31, 미국의 소리)
 -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이 지난 6월 이후 네 달 연속 증가했으나, 당초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임.
 - 실케 버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110만여 명에게 2천580t (2,587)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음.
 - 지난 9월과 비교해 수혜자 수는 91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19만 명 증가했고, 지원 규모도 2천300t (2,302)에서 12% 증가했으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지난 6월에 비해서는 무려 76%나 증가했음.

8. 북한동향

- 평양육아원·애육원(※김정은, 10월 25일 현지지도) 준공식, 10월 27일 김기남·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수길(평양시 黨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7, 중앙방송·중앙통신)
-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10.17)'과 국회의원·각료 등 집권계층들 집단참배는 "과거범죄 역사를 미화분식 하고 일본 사회에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10.27, 중앙통신·노동신문·군국주의 야망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

- 미국의 北 인권문제 지적 관련 '미국의 목적은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제도와 사상을 군사적 힘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체질적인 반공화국 적대감으로부터 나오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비난(10.2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반공화국 고립 압살을 노린 무모한 인권모략소동)
- 日 국회의원(111명)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반 평화적 망동'이라며 '일본 우익보수 세력들은 부질없는 군국주의 해외침략 책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0.29,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10.30), 北 인권문제의 국제적 대화·협력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라며 EU(유럽연합)의 '北 인권결의안' 채택 강행시 '북한과 인권문제 관여 기회 박탈과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 경고(10.30, 중앙통신)
- "미국이야말로 압담한 인권유린국가(최근 백인 경찰의 흑인 청년 사살사건 거론)"라며 미국의 對北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北)를 압살해보려는 허황한 망상의 극치"라고 조소(10.30, 중앙통신·노동신문/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 美 국무부 인권특사(로버트 킹) 발언(10.17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토론회, 북한은 왕따 국가·골치 아픈 곳으로 여행 삼가 등)에 대해 "우리(北)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 것"이라고 비난(10.30, 평양방송/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권타령)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